

#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

2024. 3. 27.

관계부처 합동

## 순 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 배경 .....          | 1  |
| II. 그간의 진행상황 .....      | 1  |
| III. 부담금 정비 방안 .....    | 2  |
| 1. 부담금 정비 기준 .....      | 2  |
| 2. 부담금 정비 대상 · 규모 ..... | 3  |
| 3. 부담금별 정비안 .....       | 4  |
| 4. 부담금 정비의 의의 .....     | 9  |
| IV.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.....   | 10 |
| V. 향후 추진계획 .....        | 11 |

## I. 추진 배경

- **(부담금 정의)** 반대급부 없이\*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(부담금관리법 §2)
    - \* 수수료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, 사용료는 시설·재산 사용의 대가
  - **(부담금 현황)** '22년 말 기준 91개, 224조원 규모 운용중(GDP의 약 1%)
    - '02년 「부담금관리기본법」을 제정하여 관리 틀\*을 마련하고,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,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지속 정비
      - \* 부담금관리법(별표)에 부담금 열거, 신설 심사를 통해 부담금 신·증설 통제 강화
      - \*\* 부담금 수(개) : ('05) 102 → ('15) 94 → ('17) 89 → ('18~'22) 90 → ('23~) 91
  - **(개선 필요성)** 국민·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·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도 존속 중인 상황
    - \* (언론·경제단체) 국민들이 부담금 부과 사실을 모르거나,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
    - 부담금관리기본법도 제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장기 존속 부담금 정비, 신설 심사 강화 등 제도혁신 필요
- ⇒ ①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고, ②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혁신 병행 추진

## II. 그간의 진행상황

- **(정비기준·대상 논의)**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, 민관 TF를 통해 부담금 정비기준 및 정비대상 등 논의
- **(관계부처 협의)** 관계부처 협의·조정 등을 거쳐 최종 부담금 정비 방안 마련

### Ⅲ. 부담금 정비 방안

#### 1. 부담금 정비 기준

- **(정비기준)**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,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\*, 평가 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

\* 집단적 동질성, 객관적 근접성, 집단적 책임성, 집단적 효용성 (2002헌가2, 2003.12.18.)

- **(폐지 기준)** 부담금 정의 未부합, 부과목적-대상 간 관련성 미흡 등

-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부과목적-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
-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
- 부과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부과 실효성이 낮은 경우

- **(감면 기준)** 부과요율·대상 등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 등

-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다한 경우
- 부담금 수입 일부를 사용용도와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
-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

- **(정비제외, 55개)** ①국민건강·환경보전 등 긍정적 외부효과, ②금융기관 출연금, ③원인자·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개수(개)     | 주요 부담금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<b>제외 부담금</b>       | <b>55</b> |   |
| ①-1 국민건강·안전 부담금     | 9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민건강증진부담금</li> <li>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①-2 환경보전 부담금        | 19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배출부과금(환경오염물질)</li> <li>■ 생태계보전부담금</li> <li>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</li> </ul> |
| ①-3 농·축·수산업자 지원 부담금 | 8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·축·수·임산물 수입이익금</li> </ul>   |
| ② 금융기관 공적기금 출연금     | 10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·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</li> <li>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</li> </ul>      |
| ③ 원인자·수익자 부담원칙 부합   | 9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교통유발부담금</li> <li>■ 광역교통시설부담금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부담금 정비 대상 · 규모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b>既往<br/>부담금</b> | <b>+</b> | <b>금번 정비안(32개)</b>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<b>=</b> | <b>정비<br/>부담금</b> |
| <b>4개</b>         |          | <b>폐지</b>          | <b>감면</b>  | <b>경감 규모</b> |          | <b>36개</b>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<b>18개</b>         | <b>14개</b> | <b>2.0조원</b>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□ (정비대상)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

\* 既정비(1.1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) 추진 중인 4개 부담금 포함시 **36개**

| 부처   | 폐지(18개)   | 감면(14개)   |
|------|---|---|
| 기재부  | ■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| -   |
| 교육부  | ■ 학교용지부담금   | -   |
| 외교부  | ■ 출국납부금   | ■ 국제교류기여금   |
| 행안부  | ■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| -   |
| 문화부  | ■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<br>■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<br>■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| ■ 출국납부금   |
| 산업부  | ■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<br>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                 | 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<br>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<br>■ 특정물질 제조·수입 부담금 |
| 농식품부 | -   | ■ 농지보전부담금   |
| 환경부  | ■ 수질개선부담금<br>■ 수익자부담금(댐건설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■ 폐기물부담금 ■ 환경개선부담금<br>■ 폐기물처분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용부  | -   | ■ 장애인 고용부담금   |
| 국토부  | ■ 원인자부담금 ■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<br>■ 시설부담금(산업단지) ■ 시설부담금(물류단지)       | ■ 개발부담금<br>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수부  | ■ 수산자원조성금 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<br>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| ■ 방제부담금   |
| 산림청  | -   | 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(경감규모) 연간 2.0조원 수준(폐지 △0.5조원, 감면 △1.5조원)

\* 32개 정비대상 부담금 '24년(계획) 9.6조원 대비 **21% 수준**

- 1년간 한시 감면: 개발부담금(△3,082억원), 석유수입부과금(△1,516억원)
- 단계적 감면 확대: 전력기금 부담금(1년차 △4,328 → 2년차 △8,656억원)

### 3. 부담금별 정비안

#### 1 국민 체감 부담 완화 : 8개 부담금

◇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,  
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·감면

- ① (전력기금 부담금)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%p 인하  
(3.7%→<sup>'24.7</sup>3.2%→<sup>'25.7</sup>2.7%)하여 국민·기업 부담을 약 9,000억원 경감
- ② (출국납부금)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4천원 인하(11→  
7천원)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(現 2세)하여 가족여행시 부담 경감  
\* (외교부) 1천원 → 폐지, (문체부) 1만원 → 7천원(△3천원)
- ③ (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)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 
부과금(입장권 가액의 3%)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  
\*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
- ④ (국제교류기여금)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 
3천원 인하\*하고,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
\* 유효기간 10년(1.5→1.2만원), 유효기간 5년(1.2→0.9만원)
- ⑤ (석유수입부과금) 천연가스(LNG) 수입부과금을 30% 수준 인하  
(24,242→16,730원/톤)하여 가스요금 인하 유도
- ⑥ (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)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분담금을  
50% 인하(책임보험료의 1.0→0.5%)하여 보험료 인하 유도
- ⑦ (수산자원조성금) 어업면허·허가, 양식업 면허·허가 등을  
받을 경우 부과하는 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 완화

## < 국민 체감 부담 완화 >

| 부담금명<br>(‘24년 계획)                      | 정비방안   | 경감액(억원)<br>(연간 환산*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대효과  |
|--|--|--|---|
|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<br>부담금(32,028억원)          | 단계적 요율 인하<br>(3.7→ <sup>1</sup> 년차 3.2→ <sup>2</sup> 년차 2.7%)    | <sup>1</sup> 년차 △4,328<br><sup>2</sup> 년차 △8,656 | 연 62만원(뿌리업종),<br>8,000원(4인 가구) 경감               |
| 외교부 출국납부금(410억원)                       | 폐지   | △410   | 출국당 30,000원 경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체부 출국납부금(4,006억원)                     | 납부액 인하( <sup>1</sup> →0.7만원) 및<br>면제대상 확대( <sup>2</sup> →12세 미만) | △1,344   | (12세 미만 자녀<br>2명이 있는 부부)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체부 영화상영권 입장권<br>부과금(294억원)            | 폐지   | △294   | 영화 1회 관람시<br>약 500원 경감<br>(관람료 15,000원 기준)      |
|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(696억원)                     | 복수여권(△3천원)<br>단수·여행증명서(면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145   | 복수여권 발급시<br>3,000원 경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<br>수입·판매부과금(17,524억원) | 1년 한시 LNG 부담금<br>30% 수준 인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1,516   | 연 6,160원 경감<br>(4인 가구, ‘23년 월평균<br>도시가스 사용량 기준) |
|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<br>분담금(348억원)         | 3년 한시 부과요율<br>50% 인하   | △174   | 연 600원 경감<br>(차량 1대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해수부 수산자원조성금(8억원)                       | 폐지   | △8   | 영세 어민 부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‘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

## 2 기업 경제활동 촉진 : 11개 부담금

◇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, 요금·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·감면

□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 완화 유도

- ① (학교용지부담금)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(분양가격의 0.8%, 공동주택 기준) 폐지(약 △3,600억원)
- ② (개발부담금)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(개발이익의 20% 또는 25%)을 ‘24년 한시 감면(수도권 50%, 비수도권 100%, 약 △3,000억원)

□ 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

- ① (환경개선부담금)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\* 대상 50% 인하(기준부과금액 15,190→7,600원/반기)  
\* 개인소유 배기량 3,000cc 이하,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
- ② (폐기물처분부담금)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,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(600→1,000억원)
- ③ (특정물질 제조·수입부담금) 특정물질 제조·수입업자의 영세성 감안, 제2종 특정물질(HFC 가스) 부과요율 인하(0.00074→0.0005%)
- ④ (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)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,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(여객운임액의 2.9%) 폐지

□ 농지의 효율적 보전·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뒷받침

- ① (농지보전부담금)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 농업진흥 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(개별공시지가 30→20%, 약 △3,500억원)
- ② (대체산림자원조성비) 산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\*하고 부과요율 일부 인하

\* 국가산업·물류단지, 의료·공익시설, 광물 채굴,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

□ 기타 정책목적,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업 부담 완화

- ① (장애인고용부담금)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\* 감면한도 상향(납부액 60→90%)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

\*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



② (폐기물부담금)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점을 부담금(판매가의 1.8%) 부과대상에서 제외

③ (방제분담금)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부담금 납부요율 인하(내항선 △50%, 외항선·기름저장시설 △10%)

### < 기업 경제활동 촉진 >

| 부담금명<br>(‘24년 계획)           | 정비방안  | 경감액(억원)<br>(연간 환산*) |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(3,598억원)        | 폐지  | △3,598              | 건설경기 활성화 및<br>분양가 인하 유도                   |
| 국토부 개발부담금(4,756억원)          | ‘24년 한시 감면(수도권 50%, 비수도권 10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3,082              |   |
|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<br>(1,516억원)    | 영세 자영업자 소유<br>경유차 50% 인하  | △133                | 부담 형평성을<br>감안하여 영세<br>기업의 부담 완화           |
|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<br>(1,561억원)   |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<br>확대(600→1,000억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11                 |   |
| 산업부 특정물질 제조·수입부담금<br>(21억원) | 제2종 특정물질<br>(HFC 가스) 요율 인하<br>(0.00074→0.0005%)                     | △6                  |   |
| 해수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<br>(53억원)   | 폐지  | △53                 |   |
| 농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<br>(13,773억원)  | 非 농업진흥지역<br>부과요율 인하<br>(개별공시지가 30→2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3,540              | 농지의 효율적<br>보전·관리 및<br>산림자원의<br>효율적 이용 뒷받침 |
|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<br>(2,286억원)  | 면제대상 확대 등<br>(국가산단, 물류단지 등)   | △155                |   |
| 고용부 장애인고용부담금<br>(8,437억원)   | 연계고용 감면 한도 상향<br>(납부액의 60→90%),<br>표준사업장 규제 완화<br>(지주회사 계열사, 의료업 등) | △529                | 기타 정책목적,<br>여건 변화 등을<br>고려하여<br>기업 부담 완화  |
| 환경부 폐기물부담금(2,003억원)         | 부과대상에서 꺾 제외   | △31                 |   |
| 해수부 방제분담금(293억원)            | 부과요율 인하(내항선 △50%,<br>외항선·기름저장시설 △1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△31                 |   |

\* ‘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

## 3

## 기타 여건 변화, 실효성 미흡 등 : 13개 부담금

◇ 경제·사회 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, 부과 실효성·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

## &lt; 기타 여건 변화, 실효성 미흡 등 &gt;

| 부담금명<br>(‘24년 계획)                   | 경감액(억원)<br>(연간 환산*) | 폐지 사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기재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<br>출연금(153억원)  | △153                | 당초 부담금 부과목적 달성  |
| 환경부 수질개선부담금(158억원)                  | △63                 | 지하수이용부담금과<br>부과목적·사용용도가 유사<br>* 지자체 수입분(60%)은<br>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|
| 산업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<br>건설비용 부담금(2,400억원) | -                   | 부담금 성격 미부합<br>* 민간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(29억원)         | △29                 | 부담금 성격 미부합  |
| 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(-)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  |
| 국토부 도로법 원인자부담금(20백만원)               | △0.2                | 부과실적 미흡,<br>부과 실효성 낮음   |
| 국토부 시설부담금(산업단지)(89백만원)              | △0.9                |   |
| 국토부 시설부담금(물류단지)(-)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  |
| 국토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(44백만원)            | △0.4                |   |
|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<br>수익자 부담금(7백만원)   | △0.1                |   |
| 해수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(-)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부과실적 없음   |
| 환경부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(-)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  |
| 산업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(-)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   |

\* '24년 징수계획을 기준으로 정비에 따른 경감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

## 4. 부담금 정비의 의의

### ① '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(관리체계)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

- 국민건강·환경보전 목적, 원인자·수익자 부담원칙 부합 등 55개 부담금과 既정비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 정비

### ○ 연간 2.0조원 수준의 국민·기업 부담 경감

- 정비대상 부담금 9.6조원('24년 계획) 대비 20% 이상

- 그간 부담금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90개 내외로 유지 중이던 부담금 수를 69개로 대폭 축소

\* (現 부담금) 91개 - (금번 정비시 폐지) 18개 - (既정비) 4개 = 69개

### ② 국민·기업이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 가능한 부담금에 집중

- 전기요금, 항공요금, 영화관람료 등 실생활과 밀접함에도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조차 잘 몰랐던 부담금\* 중심으로 정비

\* 전력기금 부담금, 출국납부금,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, 국제교류기여금 등

- 기업·사업시행자 등 부담으로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\*도 정비하여 국민 부담 전가분 완화 유도

\* 학교용지부담금,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

### ③ 부과 실효성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던 부담금 일제 정비

-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운영 가능하거나 장기간 부과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 존치, 규제로 작용하는 부담금 정비

### ④ 법령 제·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등 개정 사항은 '24.7월 시행,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은 '24.下 국회 제출

⇒ 부담금 **부과목적·원칙에 맞지 않거나, 손쉬운 재원 조달을 위해 국민·기업에 부과하던 부담금을 과감하고 신속히 정비**

## Ⅳ.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

◇ 금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하여,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·적정성 지속 점검, 신설 통제 강화 등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

### 1. 부담금 지속 정비

- ① **(정비 이행)** 폐지·감면 완료시까지 금번 정비방안 이행 점검 실시
  - 법령 개정, 요금·가격 인하 등 부담금별 정비방안 이행을 점검하고, 폐지 부담금은 「일괄개정 법률안」을 통해 조속히 추진
- ② **(지속 정비)**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·적정성 점검
  - 금번 정비 이후 존치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경제·사회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요율 적정성 등 지속 점검·정비

### 2.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

- ① **(존속기한 설정)**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
  - 현행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,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 중 →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
- ② **(신설 타당성평가)** 신설 심사 강화를 위한 타당성평가제도 도입
  - 부담금 신설 前 객관적인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실시,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신설 여부 심의
  - \* 현재는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 중 →  
(예) 부담금운용평가단 등을 통해 객관적·중립적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실시
- ③ **(신속한 구제)** 부담금 부과·징수에 대한 분쟁 심사·조정
  -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(가칭)를 신설하여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쟁송 또는 현재 심판청구 이전에 신속한 권리구제 유도

## V. 향후 추진계획

- **(시행령 개정)** 각 부처 시행령 개정 사항은 '24.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 일괄 상정·의결 추진('24.上)
- **(법 개정)** 18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('24.下)

### < 부담금별 법령 개정계획 및 일정 >

| 부처              | 부담금명                  | 조치사항  | 시행시기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□ 시행령 등 개정(13개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|
| 외교부             | 국제교류기여금               |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1 개정  | '24.7월 |
| 문체부             | 출국납부금                 |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,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농식품부            | 농지보전부담금               | 농지법 시행령 제53조, 별표2 개정  |        |
| 산업부             |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        |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개정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 |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특정물질 제조·수입 부담금        |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특정물질 제조·수입 부담금 고시 개정 |        |
| 환경부             | 폐기물부담금               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환경개선부담금               |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폐기물처분부담금              |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4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고용부             | 장애인 고용부담금             |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국토부             |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    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해수부             | 방제분담금                 |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개정  |        |
| 산림청             |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|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| 부처          | 부담금명                 |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행시기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□ 법 개정(20개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국토부         | 개발부담금                |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신설          | '24.下  |
| 기재부         |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|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제1항 개정              | '25.1월 |
| 교육부         | 학교용지부담금              |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삭제         |        |
| 외교부         | 출국납부금                |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행안부         |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| 지방자치법 제155조 삭제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문체부         |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      |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삭제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  | 관광진흥법 제64조 제1항 삭제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  | 관광진흥법 제64조 제2항 삭제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산업부         |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   | 광업법 제87조 삭제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|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삭제 및 제17조 개정       |        |
| 환경부         | 수질개선부담금              |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삭제, 지하수법 제30조의3 개정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수익자부담금 (댐건설관리법)      |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삭제 |        |
| 고용부         | 장애인 고용부담금            |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2 신설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국토부         | 원인자부담금               | 도로법 제91조 삭제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시설부담금(산업단지)          |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삭제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      |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제2, 3항 삭제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시설부담금(물류단지)          | 물류시설법 제44조 삭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해수부         | 수산자원조성금              |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삭제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         | 해양심층수법 제40조 삭제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|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        | 해운법 제22조의2 삭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## 1 국민 체감 부담 완화 : 8개

## 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(산업부, '01년~)

\* '19년 징수 2조 892억원, '22년 징수 2조 3,784억원, '24년 계획 3조 2,028억원

○ (현황)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의 3.7%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

○ (정비방안) 부담금 요율 단계적(2년) 인하( $\Delta 1.0\%p$ )

▪ (現) 3.7%  $\rightarrow$  ('24.7~'25.6) 3.2%( $\Delta 0.5\%p$ )  $\rightarrow$  ('25.7~) 2.7%( $\Delta 1.0\%p$ )

▶ [\[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 ② 출국납부금(문체부, '97년~, 외교부, '17년~)

\* (문체부) '19년 징수 4,006억원, '22년 징수 667억원, '24년 계획 4,006억원  
(외교부) '19년 징수 410억원, '22년 징수 67억원, '24년 계획 410억원

○ (현황)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

\* 공항 1.1만원 - 문체부 1만원, 외교부 1천원 / 항만 - 문체부 1천원

▪ 해외여행 출국자와 개도국 질병 예방간 관련성 미흡

○ (정비방안) 문체부 면제대상 확대 및 납부액 인하, 외교부 폐지

▪ 면제대상 확대(만 2 $\rightarrow$ 12세 미만), 출국시 납부액 인하(1.1 $\rightarrow$ 0.7만원)

▶ [\[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, 제주특별법 시행령,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개정\]](#)

###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(문체부, '07년~)

\* '19년 징수 546억원, '22년 징수 179억원, '24년 계획 294억원

- (현황) 한국 영화의 발전 및 영화·비디오물 산업 진흥을 위해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%를 관람객에게 부과
  - 영화 산업 등 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성 인정 곤란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  - 다만,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진흥사업은 다른 재원을 통해 지속 지원

▶ [\[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\]](#)

### ④ 국제교류기여금(외교부, '91년~)

\* '19년 징수 594억원, '22년 징수 289억원, '24년 계획 696억원

- (현황) 국제 우호친선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기금 조성(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재원)을 위해 여권 발급자에게 부과
  - \* 복수여권(10년 15천원, 5년 12천원), 단수여권(5천원), 여행증명서(2천원)
- (정비방안) 기여금 인하(복수여권 △3천원, 단수여권·여행증명서 폐지)
  - 민간 기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활용한 공공외교 필요성을 일부 감안하여, 기여금 인하

| 모금대상        | 모금액     |        |   | 모금대상        | 모금액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| 국내      | 국외     |   |             | 국내             | 국외            |
| 1. 복수여권 10년 | 15,000원 | 미화 15불 | ⇒ | 1. 복수여권 10년 | <b>12,000원</b> | <b>미화 12불</b> |
| 2. 복수여권 5년  | 12,000원 | 미화 12불 |   | 2. 복수여권 5년  | <b>9,000원</b>  | <b>미화 9불</b>  |
| 3. 단수여권     | 5,000원  | 미화 5불  |   | 3. (삭제)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
| 4. 여행증명서    | 2,000원  | 미화 2불  |   | 4. (삭제)     | -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

▶ [\[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\]](#)



##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[산업부, '94년~]

\* '19년 징수 1조 6,041억원, '22년 징수 1조 6,606억원, '24년 계획 1조 7,524억원

- (현황)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·석유제품·천연가스를 수입·판매하는 석유정제·수출입·판매업자에게 부과

\* (수입) 원유·석유제품 16원/ℓ, 천연가스(LNG) 3,800원/톤(비발전용은 24,242원/톤)  
(판매) 고급휘발유 36원/ℓ, 부탄(LPG) 톤당 62,283원

- (정비방안) 1년간(한시) 부과요율 인하

- 천연가스(LNG) 부과요율: 24,242→16,730원/톤(△30% 수준)

▶ [\[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 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[국토부, '77년~]

\* '19년 징수 322억원, '22년 징수 336억원, '24년 계획 348억원

- (현황)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예방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책임보험료의 1.0% 부과

- (정비방안) 3년간(한시) 부과요율 한시 인하(1.0→0.5%)

▶ [\[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 ⑦ 수산자원조성금[해수부, '02년~]

\* '19년 징수 6억원, '22년 징수 11억원, '24년 계획 8억원

- (현황) 수산자원조성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면허·허가, 양식업 면허·허가 등을 받은 어업인 등 수혜자에게 부과

- 영세 어민 대상 부담금으로 부담 경감 필요, 부과실적도 미미
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수산자원관리법 개정\]](#)

## 2

## 기업 경제활동 촉진 : 11개

### ① 학교용지부담금(교육부, '95년~)

\* '19년 징수 3,040억원, '22년 징수 2,906억원, '24년 계획 3,598억원

- (현황) 학교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1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,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

\* 공동주택(분양가격의 0.8%), 단독주택용 토지(분양가격의 1.4%)

- 무상교육 실시,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학교용지 수요 지속 감소, 기조성된 여유재원 등 감안 필요
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학교용지법 개정\]](#)

### ② 개발부담금(국토부, '89년~)

\* '19년 징수 2,978억원, '22년 징수 5,727억원, '24년 계획 4,756억원

- (현황)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택지, 산업·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\* 부과

\* (부과요율 20%) 택지개발, 산업단지개발, 관광단지조성, 도시개발,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,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,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 
(부과요율 25%)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

- (정비방안) 수도권 50%, 비수도권 100% 감면('24년 한시)

▶ [\[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\]](#)

### ③ 환경개선부담금(환경부, '91년~)

\* '19년 징수 3,878억원, '22년 징수 2,164억원, '24년 계획 1,516억원

- (현황) 환경개선 비용 마련을 위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
- (정비방안) 영세 자영업자 대상 기준 부과금액 인하
  - 배기량 3,000cc 이하 및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대상 기준 부과금액 50% 인하(15,190→7,600원/반기)

▶ [\[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# ④ 폐기물처분부담금(환경부, '16년~)

\* '19년 징수 2,044억원, '22년 징수 1,577억원, '24년 계획 1,561억원

- (현황)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·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과

\* 소각·매립량(kg) × 부과요율(10~30원/kg) × 산정지수

- (정비방안) 감면 대상 중소기업 확대(매출액 600→1,000억원)

▶ [\[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# ⑤ 특정물질 제조·수입부담금(산업부, '91년~)

\* '19년 징수 10억원, '22년 징수 7억원, '24년 계획 21억원

- (현황)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규제 및 대체물질 개발·이용 촉진을 위해 특정물질 제조·수입업자에게 부과

- (정비방안) 규제물질로 추가 지정되어 '23년부터 징수대상에 포함된 제2종 특정물질(HFC 가스) 부과요율 인하(0.00074→0.0005%)

\* 제1종 특정물질(CFC, HCFC 가스)은 '30년 내 전폐 예정

▶ [\[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\]](#)

## ⑥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(해수부, '72년~)

\* '19년 징수 55억원, '22년 징수 66억원, '24년 계획 53억원

- (현황) 공동운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 운영비용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(여객운임액의 2.9%)
  -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을 사업자에서 국가로 전환('10년 해운법 개정)함에 따라 사업자 대상 부과 타당성 낮음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해운법 개정\]](#)

## ⑦ 농지보전부담금(농식품부, '73년~)

\* '19년 징수 1조 1,746억원, '22년 징수 1조 3,312억원, '24년 계획 1조 3,773억원

- (현황) 농지의 보전·관리 및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
  - \* 농지전용면적(m<sup>2</sup>) × 개별공시지가의 30%(상한 5만원/m<sup>2</sup>)
- (정비방안) 非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
  - 보전·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부과요율 인하(개별공시지가의 30→20%, 농업진흥지역은 현행 유지)
  -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전통사찰, 관광단지(읍·면 지역)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(~'25년)

▶ [\[농지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 8]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[산림청, '90년~]

\* '19년 징수 1,580억원, '22년 징수 2,638억원, '24년 계획 2,286억원

- (현황)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

\* 산지전용허가·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(m<sup>2</sup>) × 부과요율(원/m<sup>2</sup>)

- (정비방안) 면제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인하

- 면제대상 확대(현행: 공용·공공용, 중요 산업시설 등 → 추가: 국가산업·물류단지, 의료·공익시설, 광물 채굴,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)
- 부과요율\* 내 개별공시지가 반영률 인하(1.0→0.1%)

\* 산지별·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+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

▶ [\[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 9] 장애인 고용부담금(고용부, '90년~)

\* '19년 징수 6,191억원, '22년 징수 7,637억원, '24년 계획 8,437억원

- (현황) 장애인 의무고용률(민간 3.1%, 공공 3.8%)을 충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

\* (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수 × 1인당 부담기초액)의 연간 합계

- (정비방안)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및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

-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(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액의 60→90%)
- 지주회사 계열사, 의료업 등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

▶ [\[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,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\(고용부 고시\) 개정\]](#)

## 10 폐기물부담금(환경부, '92년~)

\* '19년 징수 1,964억원, '22년 징수 2,099억원, '24년 계획 2,003억원

- (현황)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품 등의 제조·수입업자에게 부과
-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음에도 여전히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

\* 자연상태에서 쉽게 분해되고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

- (정비방안)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(판매가의 1.8% 부담금 면제)

▶ [\[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\]](#)

## 11 방제분담금(해수부, '97년~)

\* '19년 징수 259억원, '22년 징수 287억원, '24년 계획 293억원

- (현황) 기름유출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조치 소요 비용을 유조선·선박 등 방제선\* 배치의무자에게 부과

\*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제장비를 갖춘 선박

- (정비방안) 부과요율 인하

| 구분                 |      | 현행(원) |   | 변경(원)        | 감면율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기름저장시설<br>(100리터당) | 경유   | 2.76  | ⇒ | <b>2.48</b>  | △10.3% |
|                    | 경유 外 | 9.85  |   | <b>8.84</b>  | △10.3% |
| 유조선<br>(톤당)        | 내항선  | 5.48  |   | <b>2.74</b>  | △50.0% |
|                    | 외항선  | 16.46 |   | <b>14.76</b> | △10.3% |
| 비유조선<br>(톤당)       | 내항선  | 2.82  |   | <b>1.41</b>  | △50.0% |
|                    | 외항선  | 8.47  |   | <b>7.6</b>   | △10.3% |

▶ [\[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\]](#)

### 3

### 기타(여건 변화, 실효성 미흡 등) : 13개

#### ①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(기재부, '01년~)

\* '19년 징수 140억원, '22년 징수 142억원, '24년 계획 153억원

- (현황) 영농기술개발 지원 등 국내 연초생산 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(20개비당 5원)
- 既 조성 기본재산의 자산운용수입만으로도 사업비 재원 조달이 가능한 상황으로 당초 부과목적 달성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담배사업법 개정\]](#)

#### ② 수질개선부담금(환경부, '95년~)

\* '19년 징수 148억원, '22년 징수 157억원, '24년 계획 158억원

- (현황) 지하수 자원 보호 및 먹는물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 샘물등 제조·수입업자에게 부과
- \* 샘물등의 취수량·수입량( $m^3$ ) × 부과요율(2,200원/ $m^3$ )
- 지하수이용부담금과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(지자체 수입분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)
- 부담금 수입의 환경개선특별회계 귀속분(40%)은 폐지하고, 지자체 교부분(60%)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

▶ [\[먹는물관리법, 지하수법 개정\]](#)

### ③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(산업부, '91년~)

\* '19년 징수 2,618억원, '22년 징수 2,466억원, '24년 계획 2,400억원

- (현황) 집단에너지(지역난방)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부과
  - 지역난방 사용자에게 대한 설치비 성격으로 부담금 성격 미부합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\* 집단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공급자-사용자간 계약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으로 전환하여 징수

▶ [\[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\]](#)

### ④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·원인자 부담금(문체부, '86년~)

\* (이용자 분담금) '19년 징수 24억원, '22년 징수 20억원, '24년 계획 29억원  
(원인자 부담금) '14년 이래 징수실적 無, '24년 계획 無

- (현황) 관광지 등의 지원시설 건설 및 유지·관리·보수 비용을 입주자 및 공사 원인자에게 부과
  - 이용자·원인자 및 사업시행자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을 분담할 사항으로 부담금 성격 미부합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관광진흥법 개정\]](#)

### ⑤ 도로법 원인자부담금(국토부, '61년~)

\* '19년 징수 13백만원, '22년 징수 77백만원, '24년 계획 20백만원

- (현황) 타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한 도로공사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
  - 도로 손괴에 따른 대집행 비용 성격으로 부과 실효성 없음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도로법 개정\]](#)



## ⑥ 시설부담금(산업·물류단지),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(국토부)

\* (산업단지 시설부담금, '90년~) '19년 징수 2억원 '22년 징수 無 '24년 계획 89백만원  
(물류단지 시설부담금, '95년~) '19년 징수 無 '22년 징수 無 '24년 계획 無  
(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, '07년~) '19년 징수 6백만원, '22년 징수 56백만원,  
'24년 계획 44백만원

- (현황) 산업·물류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
  - 부과실적이 미미하며 부과 실효성 낮음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,  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 
택지개발촉진법 개정]

## ⑦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(행안부, '49년~)

\* '19년 징수 19백만원, '22년 징수 9백만원, '24년 계획 7백만원

- (현황)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
  - 부과실적이 미미하며 부과 실효성이 낮음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지방자치법 개정]

**8]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(해수부, '07년~)**

\* '16.7월 이후 한시 면제에 따라 징수실적 無, '24년 계획 無

- (현황)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제조·수입업자에게 부과
  - 한시 면제 지속 연장('16.7월~'24.12월) 중으로 부과 실효성 없음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\]](#)

**9]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(환경부, '99년~)**

\* '99년 도입 이래 징수실적 無, '24년 계획 無

- (현황) 댐 건설비용 일부를 하류 수력발전사업자에 부과
  - 도입 이래 부과실적 없음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\]](#)

**10]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(산업부, '94년~)**

\* '94년 도입 이래 징수실적 無, '24년 계획 無

- (현황) 광물 수급·가격안정 및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·판매자에게 부과
  - 도입 이래 부과실적 없음(법 제정 후 시행령 미제정)
- (정비방안) 부담금 폐지

▶ [\[광업법 개정\]](#)